청년이 공감하는 정책 발굴

전북도 · 전북청년허브센터,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 개최

청년정책은 진짜 청년이 만들자!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가 김제 청년공간인 '이다(E:DA)'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센터장 박광진)는 김제시와 군산시, 익산시 지역 청년(18세~39세)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은 팀별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점 발굴,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표, ▲제안된 아이디어 중 가장 공감되는 정책을 선정(3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진행된 '청년소통학교'는 도내 14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진행했고, 도내 150여 명의 청년이 참여, ▲청년 일자리 분야뿐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가 김제 청년공간인 '이다(E:DA)'에서 열렸다.

그동안 제안된 아이디어 중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들로는 ▲공동주거 공간, 읍·면 지역 임대주택 지원 등 청년 주거환경,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 지원, ▲세대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프로젝트 등이었다.

전북도는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을 시·군 및 청년센터와 공유하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현영 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이번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더욱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된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는 도내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전북도 청년정책포럼단'과 지역 청년활동가, 청년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모여,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 개 대상… 신고 기간 내 과태료 면제 · 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

전북도는 동물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주택·준주택 이외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또는 관할 시·군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신고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및 소유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다.

변경 신고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견주가 변경신고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는 동물등록증을 챙겨 시·군청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전북도는 자진신고 기간에 민관합동 홍보반을 편성해 공원, 천변 산책로 등 반려견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도내 동물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견주에게 동물등록제도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부터 한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 동물등록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견주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소중한 나의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임산부 · 영아 가정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본격 추진

간호사 ·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전담팀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도내 전 시 · 군으로 확대키로

전북도가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영아기 대상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 2020년도에 21개 보건소가 선정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김제시 등 9개 보건소가 신규로 추가 선정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소득·재산과 상관없는 보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 심리사회적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군으로 분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전담팀이 가정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본방문' 대상의 경우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환경 등 아기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한 임신·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속방문' 대상의 경우는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평균 25회~29회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양육서비스 지원, 가정폭력이나 소아발달 문제 등과 관련된 다른 지역사회 자원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속관리한다.

천선미 도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부터 체계적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내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위험 임산부 가정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관리와 양육지지 환경 조성을 통해 취약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산란계 농장 대상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전북도가 올해 겨울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농장의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을 고려해 1~3등급으로 분류한 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도는 오는 8월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역이 우수한 적합등급(1~2등급)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축산농가 자율방역 수준이 향상돼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사육농장은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시·군 방역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6월 전북도 위상 빛낸 부서 선정

'이달의 으뜸 도정상' 최우수-농촌활력과 · 우수-사회복지과 · 기업지원과 · 인권담당관

6월 전북도를 화려하게 빛낸 4개 부서로 '농촌활력과', '사회복지과', '인권담당관', '기업지원과'가 선정됐다.

도는 지난 16일 6월 중 업무성과가 탁월해 전북의 위상을 빛낸 4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부서는 농촌활력과, 우수 부서에 사회복지과, 기업지원과, 인권담당관이 선정됐다.

최우수 부서인 '농촌활력과'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기능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6월 중 업무성과가 탁월해 전북의 위상을 빛낸 4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

특히, 농촌활력과는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공모사업에 전국 최고의 선정률 달성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농촌형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이바지했다.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원방식을 전환하고 투자를 집중해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3개 시·군에 총 1,258억 원(국비 900, 지방비 358)을 확보했다.

시·군당 국비 지원액은 무려 300억 원에 이른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7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라는 기록을 세웠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으로 내년도 추가 배분 예산을 받게 된다.

'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 시대에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 전환과 함께 디지털 사업환경을 조성,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지원 등 활성화가 기대된다.

호남권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14억 원을 지원받아 76개소 화상 회의실을 구축,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의 비대면 화상회의 지원으로 전북형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게 됐다.

'인권담당관'은 2021년 전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로, 전북인권 사무소 설치와 인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부각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순수 인권옹호자 포럼으로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 구독자 수가 261% 증가하는 등 도민 참여형 적극 행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전대식 도 정책기획관은 "도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함으로써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도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